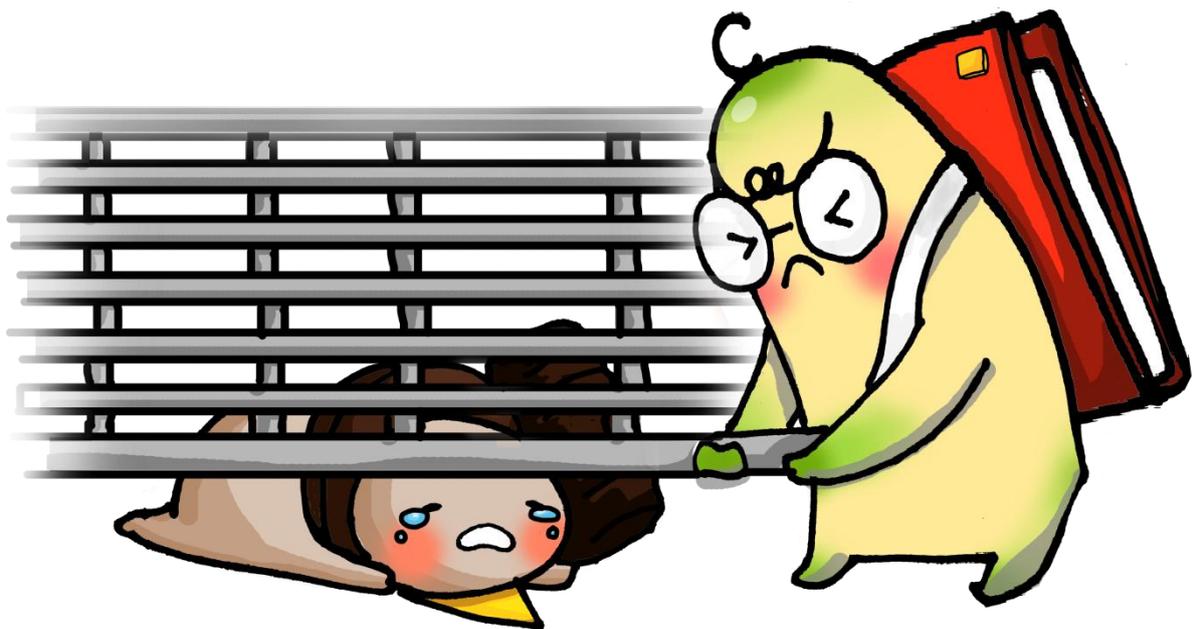


컨슈머워치 모의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갈수록 태산
-중소상인 보호인가, 소비자 편익 증진인가

2015. 3. 16(월) 오후5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209호



프로그램

인사말 : 김정호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법률자문 : 이현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의국회 :

사회 및 의장 : 정소담

백원도당 : 장형주, 박성준

허투루당 : 이상지, 송현수

자유발언 :

소비자라면 누구든 발언 가능!

영상상영 :

〈백원도와 허투루의 이야기〉

산 넘고 물 건너 장보러 가는 길

갈수록 태산, 〈유통산업발전법〉

지난해 12 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통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백원도당’을 가상으로 설정해, 유통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본 모의국회를 개회합니다.

최근 발의 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 2014년 12월 11일 이종걸 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913052)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 2015년 1월 14일 손인춘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1913667)
“최근 국내에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가구뿐만 아니라 관련 잡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가 되어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전문점이라도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규제를 달리 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 이 외에도 유사한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 과연 현실을 고려 한 입법인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부재한 상황. 이에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백원도당’과 기존 정당의 모습을 대변하는 ‘허투루당’을 설정하여 법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론문 ;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14년 12월 11일 이종걸 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913052)

허투루당 A 의원

허투루당 A 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후보 모두가 내 걸었던 것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이었죠. 대한민국 헌법 119 조 2 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걱정안 소독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은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부가 불리는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골목상권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실현, 그리고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법을 통한 대형마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원도당 A 의원

백원도당 A 입니다. 헌법 119 조 2 항에 앞서, 제 1 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흔드는 명백히 위험적인 법안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소비자의 권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재래시장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에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마트 이용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주말에 장을 봐야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음으로써 오히려 동네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 부담이 더 늘게 되는 꼴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는 법안입니다.

허투루당 B 의원

허투루당 B 입니다.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전통시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미 꽤나 지대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논산딸기축제는 논산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 축제는 논산에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제로 인해 233%의 매출 증가를 보인 점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 성공한 사례의 시장 마케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기재부에서 매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원도당 B 의원

백원도당 B 입니다. 저는 휠체어 이용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우 대형 아울렛이나 상설할인매장과는 달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경우 골목이 좁아 휠체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계단이나 둔턱으로 인해 상점 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카트가 움직이는 동선으로 휠체어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접근이 훨씬 용이합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 정책은 다수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권리 역시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투루당 A 의원

백원도당 A 의원께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2012 년도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통해 시장의 상권이 더 살아났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휴무일 중 40% 이상의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 송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점포 비율은 10.3%, 5~10% 미만이 13.8%, 5% 미만 증가가 17.9%라고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그 반작용으로 재래시장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40% 이상의 전통시장 점포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원도당 A 의원

네 좋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매출이 올랐다고요? 일부 점포의 아주 미미한 상승률입니다. 영업제한 강제로 인해 원하시는 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는지 아십니까? 월평균 2,307 억원, 연간 총 2 조 7,678 억원의 소비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소비 전환액이 월평균 448 억~ 515 억밖에 안됩니다. 즉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 얻은 매출 증대보다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 감소가 훨씬 큼니다. 그럼 월 1800 억원에 달하는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돈을 안쓰는거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데 경제가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백원도당 B 의원

맞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당연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발상입니다. 저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도, 전통시장은 수많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공간이 못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친절함과 같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주차공간도 여의치 않고 카드결제도 어렵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의 기본일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안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달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진입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결제 시행률을 약 3.9%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카드결제의 어려움은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죠. 그러나 대형마트와 경쟁하면서 전통시장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은 경쟁할 때 생긴다는 말이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허투루당 B 의원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미비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대형마트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쟁 좋죠. 그러니까 자유경쟁적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유통채널을 보유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경쟁이 됩니까?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전통시장이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자본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투루당 A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특색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그게 매출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적절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백원도당 A 의원

의원님들 혹시 전주 남부시장 아시는지요? 거기도 다 죽어가는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전국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야시장이 열리는데 1 만명이 찾는대요. 청년들이 들어가서 장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던데, 덕분에 그 시장에 있는 점포들이 대부분 매출이 20~30% 늘었다고 합니다.

백원도당 B 의원

경쟁력 있는 점포들이 등장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 보호를 위해 다른 업종을 강제로 규제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의 영업을 강제로 침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법안은 소비자 선택권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백원도당 A 의원

지난 2 월, 경북 포항시 두호동 복합 상가 호텔 내 롯데마트 대형 매장 입점을 두고 벌인 포항시와 롯데쇼핑간의 법정다툼에서 포항시가 승소함에 따라 롯데마트 입점은 좌절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이 좌절되면서 그 지역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게 된 것인데, 개정안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심지어 현행 1 킬로미터 이내에서 2 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된다면 얼마나 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스럽습니다.

허투루당 B 의원

전 오히려 주변 상권과 재래시장을 지켜내고자 한 법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사례라고 봅니다. 두호동에서 약 5 분 정도의 거리에 롯데마트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양덕에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두호동 주민들은 롯데마트가 입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격이 실제로는 거의 없지 않나 싶네요. 오히려 과도하게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방지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원도당 B 의원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월마트가 들어간 지역의 물가가 13%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봐도, 서울시내 대형마트가 많은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낮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많았던 중랑구나 강서구가 서울 시내에서 물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타격이 거의 없지 않나 싶다'는 이야기는 그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선택권은 철저히 소비자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더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의 1km 에서 2km 로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투루당 A 의원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대형마트를 건설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대형마트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확장, 발전시키며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법으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이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규제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의 1km 에서 2km 로 늘리는 법안은 필요합니다.

☐ 2015년 1월 14일 손인준의원 등 11(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1913667)

의장

손인준 외 11 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전문점은 사실상 이케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허투루당 B 의원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거대 자본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케아는 세계적인 거대자본입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으로 '가구 공룡'이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런데 전문점이어서 대형마트가 받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이케아가 대형마트가 아닐까요? 이케아가 판매하는 8600 여 가지 품목 중 가구는 40%뿐입니다. 온갖 생활 잡화에 심지어 안에 식당까지 있어요. 당연히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

허투루당 A 의원

거기다가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이케아가 들어오자마자 광명 가구거리 손님들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이 디자인과 가격 등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케아를 이기기 힘들습니다. 주말에 휴무를 좀 해야 가구판매 상인들도 살죠. 그리고 어쨌든 이케아의 취급 품목 중 가구류의 비중이 40 퍼센트이고 주로 잡화가 많은데 현행법상 전문점으로 분류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구업체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케아가 취급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원도당 A 의원

혹시 두 의원님들은 광명에 가보셨나요? KTX 광명역이 2004년 광명에 들어섰죠. 그런데 그 후로도 8년 이상 허허벌판이었어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떤줄 아십니까?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이케아를 가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쇼핑특구가 되었어요. 즉 다 죽은 광명땅을 살려놓은거죠. 그런데 소상공인을 죽인다니... 좀 모순적인 말 아닌가요?

백원도당 B 의원

맞습니다. 특히 이케아의 한국 첫 진출인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높았죠. 이케아가 한국에 매장을 오픈하기까지는 광명의 적극적인 유치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광명 시장이 직접 스웨덴 본사를 찾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케아 팬이어서 그랬겠습니까?

광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구 외 품목을 많이 판다고 해도 가구랑 관련한 품목들입니다. 고기랑 채소 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투루당 A 의원

광명 가구단지만 말하는게 아니에요. 기존의 가구 거리들 중에는 차로 이동해야 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케아가 생김으로써 가구 거리에 갈 수 있는 손님들이 다 이케아로 흡수 되겠죠. 가구거리에는 맛있는 것도 안 팔고 잡화도 없으니까요. 음식도 팔고 잡화도 파는 이케아를 가구 특화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백원도당 A 의원

가구단지의 매출은 이케아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또는 저가의 국내 브랜드 때문에 줄어들고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이케아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가구를 구입하는데 있어 선택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원룸 사는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약 올리지 말고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케아는 외국 기업입니다. 광명시에 입점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 들어오게 해놓고 법으로 휴무를 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국제법상 의무휴업을 이케아에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테고요.

허투루당 B 의원

이케아가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광명에 왔으면 광명의 기업이 되어야 하고, 광명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케아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좀 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원도당 B 의원

광명에 있다고 광명의 기업은 될 수 없죠. 우리는 국제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의 외국 기업을 규제하면 누가 한국에 들어옵니까?

허투루당 A 의원

안 들어오면 우리 소상공인 살고 좋죠 뭐.

백원도당 B 의원

무엇보다 다른 요일도 아니고 일요일에 닫으면 가구를 어떻게 끌라요? 가구의 특성상 가족들이 다 같이 보고 결정해야 하니 주말에 쇼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주말 영업규제는 어마어마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케아 광명점 매출은 하루 평균 평일 4 억원, 주말·공휴일은 10 억원입니다. 멀리까지 가구 사러 휴일에 오는거죠. 일요일에 문 닫으면 이제 가구 사려고 회사에 월차 내야겠네요. 이참에 회사 복지로 “가구 월차” 의무화 법안도 통과시키시죠?

허투루당 A 의원

이케아가 문 닫은 날 그냥 다른 가구거리 가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이케아는 인터넷 주문도 되지 않나요? 게다가 영업규제는 겨우 한 달에 두 번인데, 크게 불편할거 같지는 않은데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소상공인 위한 날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백원도당 A 의원

소비자들의 선택을 법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면 되죠. 법으로 규정해서 소비자를 조정하려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소비자는 자신의 원하는 물건을 살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 년에 생겼어요. 1993 년에 이마트가 생겼고, 96 년에 까르푸가 국내 시장에 입점하고 98 년에 월마트가 들어왔습니다. 97 년도 법에 대형마트를 정의했는데 그때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면 무슨 말인가 가우퐁한테 이게 바로 월마트, 까르푸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세계 거대자본이라는 까르푸랑 월마트 어떻게 됐나요? 망해서 나갔습니다. 왜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 그리고 서비스를 겸비한 이마트는 갈수록 성장하고 나아가 다른 대형마트의 성장까지 가져왔어요. 이렇게 발전 아닙니까?

허투루당 B 의원

네, 발전 경쟁 다 좋다 그겁니다. 지난 달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광명시에 위치한 200 여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케아(IKEA)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벌였어요. 조사결과 83.5%의 업체들이 이케아의 의무휴업제 적용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광명시 가구점 및 생활용품점 중 80 퍼센트 이상이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점에서 부정적인 비율이 92.3%나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소상공인들이 공룡한테 말살 최소한의 시간은 주셔야죠.

백원도당 B 의원

소비자 권익문제뿐만 아니라 이케아 영업규제 그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문제입니다. 이건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규제를 하면서 한국을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규제는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경미하고 오히려 소비자체를 줄여서 경제만 침체시킬 뿐이라는 게 증명되었는데 말이에요.

허투루당 A 의원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 아닙니다. 음식도 팔고 잡화를 그렇게 파는데 그게 무슨 가구전문점입니까?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를 위해 서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허투루당 B 의원

국내 중소상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닌가요?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는 무시 되어도 좋은 것인가요? 이미 입점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원도당 B 의원

교통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케아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국내가구의 품질과 가격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케아의 등장으로 국내소비자들은 중저가에 세계 최고 품질의 가구를 직접 눈으로 살피고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케아의 등장은 국내 가구업체에도 오히려 활력을 불어 넣고 있어요. 국내 가구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샘, 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케아의 등장에 맞서 대규모 세일, 매장 확장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방어 전략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업체는 당연히 살아남게 됩니다.

백원도당 A 의원

그리고 이케아가 가구와 어울리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전략이고 마케팅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논스톱 쇼핑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이득이죠.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규제 하겠다니, 정부가 정해진 품목만 팔아야 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이케아로 향하는 소비자의 발길을 억지로 돌려서는 광명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케아는 값이 싸 대신 배송이나 조립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해요. 서비스를 중시하고 오랫동안 한 가구를 쓰고 싶은 소비자에게 이케아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소비자 각자 취향에 맞는 시장으로 향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정하나요?

〈백원도와 허투루의 이야기〉

산 넘고 물 건너 장보러 가는 길

시놉시스 :

1997년 7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효력을 발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이 법의 탄생과 함께 ‘허투루’와 ‘백원도’의 역사는 시작된다. 함께 나고 자란 원도와 투루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태어날때부터 금빛 손수건을 두른 투루는 고민에 휩싸이는데.... 그 이유는 비현실적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고민. 착해 보이기 위해서 일단 발의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투루. 원도는 시무룩한 친구 투루를 위해 모험을 나선다. 친구가 발의한 법안에 따라 장을 보러 직접 나선 것.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장보러 가는 원도의 도전은 시작한다. 이 도전, 과연 괜찮은 것일까.....?

소비자의 불편이나 현실 반영 없이 “중소기업vs.대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린 국회. 이는 굳게 닫힌 대형마트의 문 안에 오도 가도 못하는 투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 투루를 구해 주기 위한 원도의 험난한 여정. 원도로 대변되는 소비자의 의견이 국회로 전달 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